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속도 낸다

내년 국비 올보다 14.8% 증가한 800억 확보 기업·기관 업무협약, 사관학교 개소 등 성과도

광주시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시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예산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예산이 올해 697억원보다 103억 5000만원이나 증가(14.8%)한 800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7건의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4건 123억 5000만원, 계속사업은 3건 677억원

이다. 2021년도 국비사업으로 건의한 11개 사업(1009억원)의 79.3%인 7개 사업의 국비를 반영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세부 반영사업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45억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20억원) ▲인공지능 기반 취약계층의 개인맞춤형 국가돌봄서비스(12억원) ▲인공지능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70억원)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과 플랫폼 구축(24.5억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25억원), ▲인공지능 컨퍼런스(4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인공지능분야 국비확보를 위해 자치구,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국비 대응-발굴 협의체를 발족해 정부 정책과 방향을 검토하고 지역에 맞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등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특히 예산편성 시점에 맞춰 주무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타당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800억원대의 대규모 예산확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AI중심의 광구형 3대 뉴딜을 위한 광주시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

전문기업 기업유치, AI 인재양성 등을 통해 광구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55개의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중 33개의 기업이 광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1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지난 7월 개교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해 1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500여명에게 실시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인공지능 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종합지원센터 개소, 인공지능 광주창업캠프 내 35개 기업 입주, 1000억원 규모 인공지능 투자펀드 조성 등 다양한 성과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옛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광주복지재단 등 5개 기관 입주

광주시는 "서구 화정동 옛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광주복지재단 등 5개 기관·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서구 유촌동 새 청사로 옮겨갔다. 5개 층 가운데 1~3층에 복지 관련 5개 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1층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서구종합재가센터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2층은 광주복지재단, 3층은 광주광역자원봉사센터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들어선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주하고 나머지 4~5층은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는 실험 용도로 활용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중이며, 시설물과 물품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동킥보드' 잇단 화재 전남도, '과충전' 주의

전남도내에서 전동킥보드와 관련 배터리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심이나 유휴지, 공원, 대학 캠퍼스 등을 누비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기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화재 중 5건이 과충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광양 고층아파트 화재도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했으며, 지난 3일 일가족 3명이 대피했던 다가구 주택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전자제품 충전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7건의 화재로 사망자 2명과 3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비엔날레 신임 사무처장에 김옥조 전 광주시 대변인 임명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신임 사무처장에 김옥조(56·사진) 전 광주시 대변인이 임명됐다. 광주비엔날레는 8일 신임 사무처장에 김옥조 전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사무처장은 이전까지 광주시 파견 공무원이 맡던 자리였으나 이번부터는 개방형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지역신문에서 미술 전문기자 등으로 활동했으며 광주전남기자협회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또한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조선대 미학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광주비엔날레 측은 설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취약계층에 보낼 사랑의 선물 주머니 8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강당에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원들이 취약계층에게 보낼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제작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위한 아이디어 시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랜선 소통콘텐츠 공모전 11일까지 국민참여평가

광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콘텐츠의 우수작을 선정하는 국민참여평가를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2020 랜선 소통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다. 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살기좋은 광주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콘텐츠를 선정해 광주시 대표 홍보매체 등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총 48건(일반부문 41건, 청소년부문 7건)을 접수 받아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6건(일반부문 10건, 청소년부문 6건)을 선정했다.

시는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우수작을 뽑는 국민참여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평가점수에 2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평가가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로그인 후 공개된 본선 진출작을 감상한 뒤 영상 내용·완성도 등을 평가해 가장 공감가는 작품에 투표하면 된다.

국민참여평가 후에는 비대면 공개 경연인 본선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순위를 겨룬다.

본선 당일에는 시민 대상 선착순으로 모집된 랜선 청중심사단 100명이 공개경연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최종 평가점수 30%에 반영되는 심사를 진행한다.

김이강 광주시 대변인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평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진실규명 필요한 과거사 신청서 접수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신청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 독립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이나 친족, 목격자 등이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등 총 6곳의 접수처를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받거나 오는 10일 개통할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저작권 상담·등록지원
- 저작권 자문 컨설팅 지원
- 저작권 육성 지원
- SW자산관리체계컨설팅

지원기간
매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모집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ICT·콘텐츠 기업 등)

문의
전화 : 061-339-6994
이메일 : pjy@jci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